

# 부채 5.2조 ‘돈먹는 하마’ 광물공, 타 기관과 통폐합

투자액 대비 회수액 고작 10%  
혁신 TF, 산업부에 통폐합 권고  
통폐합 대상 광물관리공단  
“동반부실 초래... 책임 떠넘기는 꼴”  
강력 반발에 통폐합 쉽지 않을 듯



지난 5일 한국광해관리공단 우리노동조합 홍기표 위원장과 조합원 70여명이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해외자원개발 혁신 TF가 권고한 기관 통합안에 대한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다. /뉴스시스

무리한 해외자원개발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결국 다른 공공기관과 통폐합될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인 ‘해외자원개발 혁신 TF’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이 같은 방안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광물공사와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한국광해관리공단 노조는 강력 반발하고 나서 앞으로 통폐합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6일 산업부에 따르면 TF는 지난 5일 오후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광물공사 부실사업 처리방안을 발표했다.

TF는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실태 점검과 지질자원연구원의 경제성 재평가 결과, 광물공사가 존속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TF에 따르면 광물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 부실로 부채 규모가 2008년 5000억 원에서 2016년 5조2000억원으로 급증해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누적 회수액 5000억원은 총 투자액 5조 2000억원의 10% 수준에 불과하며 확정된 누적 손실액 19억4000만 달러는 총 투자

액의 41% 수준이다. 정부가 2016년 6월 수립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따라 자산매각과 조직·인력 축소 등 구조조정을 이행하고 있지만, 구조조정 지연과 주요 사업 생산실적 저조로 경영개선 성과가 미흡하다고 TF는 평가했다.

TF 관계자는 “해외사업 계속 운영 시 향후 추가적인 손실 발생 가능성이 매우 커 국민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며 지

속적인 유동성 위험에 대한 해결 방안이 부재하다”고 말했다.

다만 “공사를 즉시 청산할 경우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확대, 공적 기능의 유지와 고용 문제 등에 대한 해결이 곤란하다”며 “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직접 투자 업무는 폐지하고 광업지원, 비축, 해외자원개발 민간지원 등 공적 기능은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공사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유동성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정부 부처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후 TF는 ‘원인규명·재발방지 분과’에서 해외자원개발 부실 실태와 원인,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권고안에서 통합 대상 기관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전 회의에서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TF 권고안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대상 기관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 같은 TF의 결과가 발표되자 광물공사 노조는 즉각 성명을 통해 부실책임이 공사와 공사직원들만의 책임이라는 무분별한 비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MB 정부와 정권 수뇌부, 당시 산업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 당국자, 그리고 공사의 경영상황을 무시하고 특정한 사업에 과도한 투자를 결정한 전임 경영진의 책임자를 밝힐 것을 촉구한다”며 “조합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인력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논의도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안정적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광해관리공단우리노동조합도 “근본적인 부채해결방안 없이 동반부실을 초래하는 기관통합안에 절대 반대한다”며 “이전 정권 적폐의 산물인 부실 해외자원개발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책임자 처벌과 국민 상식에 맞는 광물자원공사의 구조조정방안을 시행하라”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 산업부, 美에 철강관세 대상 제외 요청

김현중 본부장, 9일까지 미국 방문  
주요 상·하원의원에 韓입장 전달

정부가 조만간 확정되는 미국 정부의 철강 관세 조치를 방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부터 9일까지 미국을 다시 방문해 한국산 철강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지난달 25일부터 3월 2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미국 행정부 주요인사와 상·하원의원, 주 정부 및 제조업·농축산업계 인사 등을 만나 미국이 발표한 철강 관세 대상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해줄 것을 설득했다.

이번 방문에서 김 본부장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행정부 인사와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 등 주요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정부 입장을 전달하는 활동을 할 예정이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도 지난 5일 로스 상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232조 관세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지난 5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폭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대외통상관계장관회의 모습. /연합뉴스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당면한 통상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고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조치에 대한 세계 각국의 반대는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은 5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출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어떠한 관세에 대해서도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고 AF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프릴랜드 장관은 이날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7차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종료 후 미국, 멕시코

측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캐나다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규제가 부과된다면, 캐나다는 우리의 무역 이익과 우리의 노동자들을 지키기 위해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도 미국의 철강 관세폭탄에 피해국들과 연대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전직 고위 관료와 관련 학자들을 인용해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 관세에 맞서 중국은 유럽연합(EU)과 캐나다 이외에 다른 국가들과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 올 공공주택 14만8000호 공급

국토부, 공급 세부계획 수립

정부가 올해 공공주택 14만8000호에 대한 공급계획을 수립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공주택(공공임대주택+공공분양주택) 공급계획에 대한 권역별 및 사업자별 등 세부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의 5년간 100만호 공적주택 공급계획에 따른 것으로 올해 공급 계획인 14만8000호에 대해 지자체별 공급계획 조사 및 조정 등 협업을 기반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권역별로 살펴보면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경기 2만9000호, 경상권 1만

8000호, 충청권 7000호가 공급된다.

매입형 및 임차형 공공임대주택은 서울 1만7000호, 경기 1만3000호, 경상권 1만2000호 등이 공급된다.

공공분양주택은 기존 택지를 활용해 권역별로 경기 5000호, 충청권 8000호, 서울 2000호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사업자별로는 LH가 11만1000호, 서울시(SH 포함)가 1만4000호 등을 공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8년 공공임대 13만호 및 공공분양 1만8000호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한 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연말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 ‘말 산업’ 경제적 효과 3조4200억원

전년비 0.3%p 증가... 총 2만7210두

최근 승마 인구 증가로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말산업의 경제적 효과가 3조4200억원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17년 말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말산업 경제적 효과(2016년 말 기준)는 2015년 말 기준 대비 101억원(0.3%) 증가한 3조4221억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사육두수는 총 2만7210두로 2016년 보다 94두 증가했고 승마인구는 94만8714명으로 전년도 보다 1만 명 이상 증가해 승마가 취미활동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관련 산업 또한 성장세를 보였다.

말산업 사업체 수는 2016년 대비 8.4%(192개소) 증가한 2470개소로, 이중 말보유 사업체수는 2016년 대비 9.5%(186개



지난해 경기 과천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서울’ 86승마경기장에서 열린 ‘말 운동회’ 모습. /연합뉴스

소) 증가한 2146개소로 조사됐다.

특히 정부의 말산업 육성정책 일환으로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설치 지원 사업을 진행한 결과 지난해 농어촌형 승마시설수는 2016년 대비 18.9%(27개소)가 증가했으며 전체 승마시설수 역시 2016년 대비 6.9%(33개소) 증가한 512개소로 조사돼 제1차 말산업육성 종합계획에 따른 목표인 500개소를 달성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 ‘뇌물수수 의혹’ 이명박 14일 소환

檢, ‘피의자 신분’ 출석 통보

검찰이 100억원대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음주 소환 조사한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이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 받으라고 소환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진행된 수사 상

황을 감안할 때, 실제적 진실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출석요구에 응할 경우, 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하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5년 ‘12·12 및 5·18 사건’ 수사를 맡은 검찰 소환에 불응해 ‘골목길 성명’을 발표하고 고

향 합천으로 내려갔다가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 소환을 통보하기 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수사 경과를 보고하고 향후 수사 계획에 관한 재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이 국정원에서 최소 17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김 전 기획관을 구속 기소 하면서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했다.

/이범중 기자